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



1.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10대 사회이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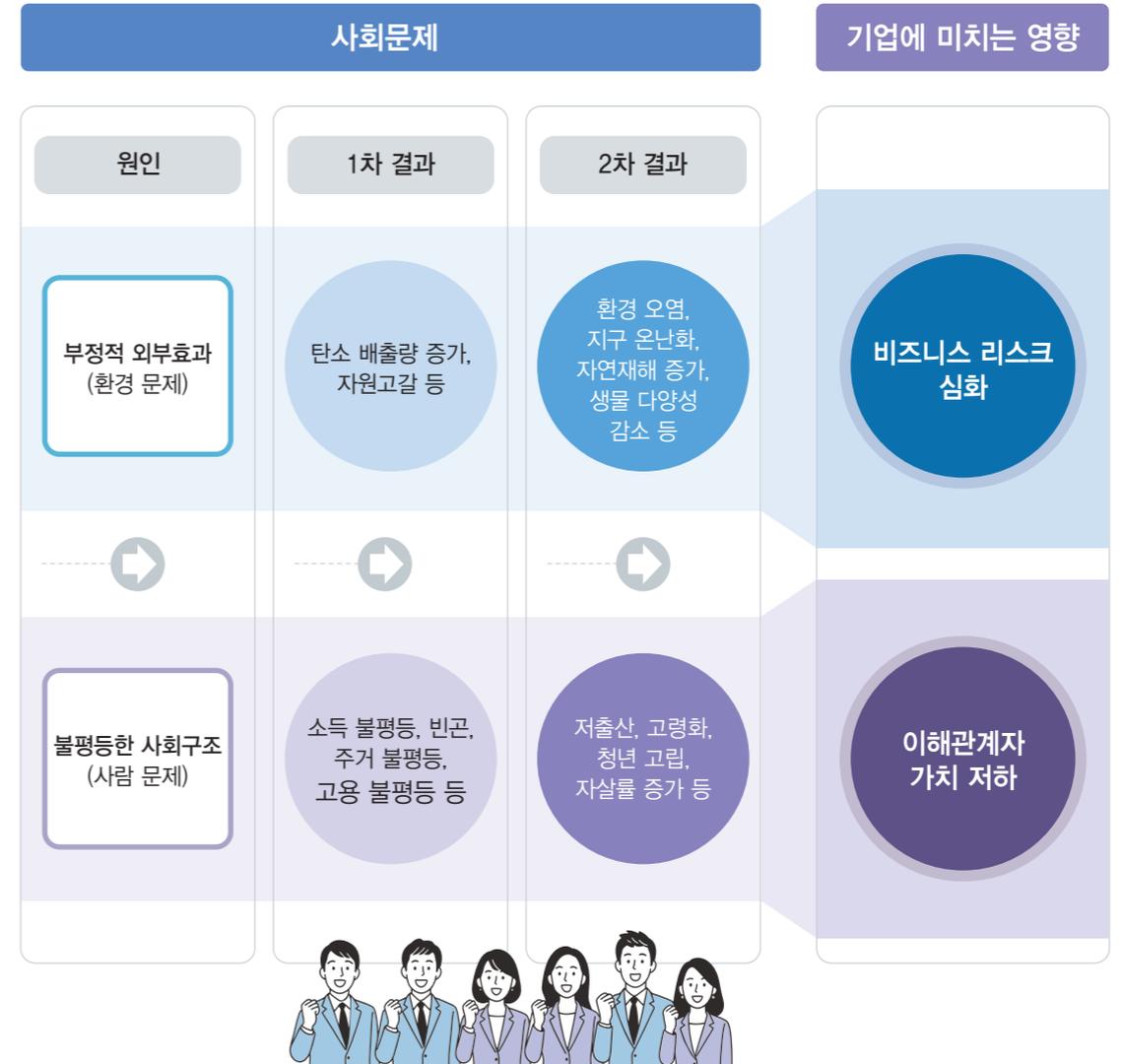
민간의 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실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슈’에 2020년만 하더라도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과 2022년에 ‘폭염, 한파’가 7위로 등장하였으며, 2024년에는 4위, 2025년에는 3위로 급상승하였다.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위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2위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3위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감염병 확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폭염 · 한파 증가
4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폭염 · 한파 증가	이념 · 지역 · 정치적 갈등 심화
5위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미세먼지 증가	이념 · 지역 · 정치적 갈등 심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6위	노후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7위	학벌지상주의	폭염 · 한파 증가	폭염 · 한파 증가	가계부채 증가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8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학벌지상주의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가계부채 증가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위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청년일자리 부족	감염병 확산	청년일자리 부족	이념 · 지역 · 정치적 갈등 심화	지구 온난화
10위	청년일자리 부족	노후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지구 온난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2. 사회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 등의 ‘환경’ 문제와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인해 유발되는 ‘사람’ 문제는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즈니스 리스크 심화와 이해관계자 가치 저하를 야기한다.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

조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hee3474@cses.re.kr

최근 사회문제 발생 속도가 해결 속도를 넘어 서면서 정부 외에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그중에서도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풍부한 자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연계된 밸류 체인,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사회문제를 기업이 해결했을 때 기업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임팩트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제가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이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동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I. 들어가며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 아마 빈곤, 소득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생각날 것이다. 요즘 가장 크게 화두가 된 문제는 갑작스러운 폭우인 것 같다. 2025년 7월 중순, 5일 동안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공공시설 피해도 1,999건이나 접수됐다(한국일보, 2025). 충남 지역 피해액만 3,66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5). 이렇게 본다면 최근 심각한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폭우, 폭염, 태풍, 산사태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지상에서 많이 거론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보통 사회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왔다. 2016년에 384.9조 원이던 예산이 2025년에 673.3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1.75배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그런데 문제는 사회문제의 증가 속도를 해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17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¹⁾ 목표 달성 수준이 49.3%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Sachs et al., 2024; 조희진, 2025). 이는 사회문제의 복잡성, 다양성 증가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만 생각되던 기업의 역할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1) 2015년에 UN은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인 SDGs를 발표했고 이를 193개 국가에서 채택했다. 따라서 SDGs는 각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을 가늠하는 보편적 지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잠재성장률 1%대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각종 사회문제까지 산적해 있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사회문제 해결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가 풍부한 자원과 역량, 혁신적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7개 SDGs 중 우리나라의 이행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7번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재생에너지)’, 8번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성별 임금격차, 산재 사망자 등)’, 13번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배출량)’, 14번 ‘해양생태계 보존(해양쓰레기)’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목표이다(조희진, 2025; 통계청, 2024).

기업들을 사회문제 해결에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기존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할까? 만약 그렇다면 기업들은 핵심 비즈니스와 관계없는 사회공헌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낮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WEF, 2025; 임가영, 2025). 따라서 기업들이 사회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나 새로운 시장 발굴 혹은 비즈니스 기회 선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즉,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때 기업들의 참여 유인도 분명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문제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

II. 사회문제, 기업과 관련이 있나? ●●●●●

“사회문제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자연재해 문제로 사회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는 2060년까지의 강수량 예측치로 연간 경제적 피해 비용을 추산했을 때 최대 26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23). 이는 우리나라 GDP의 1.03%에 해당하는 액수로

절대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더군다나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있어 그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UNDRR, 2019; 조희진, 2024). <그림 1>에서 보듯이, 실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8년 대비 2023년 사망자 수는 2배 넘게 급증하였다. 이에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자연재해’를 선택한 비율이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24).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표 1]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계층 갈등
2022년	14.5	4.0	8.4	8.0	13.3	9.6	21.0	13.9	7.0
2024년	16.2	6.8	10.0	8.0	16.5	9.8	7.9	17.9	6.4
증가율	11.7	70	19.0	0	24.1	2.1	-62.4	28.8	-8.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최근에 발간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지성 교수의 ‘1도의 가격’에서도 국가별로 연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1인당 GDP가 8%씩 낮아진다고 보았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의 숨은 비용을 떠안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가 증가하다 보니 국민들도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점차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트리플라잇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만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10대 사회이슈’에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2021년과 2022년에 ‘폭염, 한파’가 7위로 등장하더니 2024년에는 4위, 2025년에는 3위로 급상승하였다.²⁾ WEF에서도 매년 글로벌 리스크 순위를 발표하는데 2020년대 들어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1, 2위를 다툰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WEF, 2025).

[그림 2]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10대 사회이슈 변화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위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2위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3위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감염병 확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폭염·한파 증가
4위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폭염·한파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5위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미세먼지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6위	노후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결혼/출산/양육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7위	학벌지상주의	폭염·한파 증가	폭염·한파 증가	가계부채 증가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8위	결혼/출산/양육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학벌지상주의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가계부채 증가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위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청년일자리 부족	감염병 확산	청년일자리 부족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지구 온난화
10위	청년일자리 부족	노후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결혼/출산/양육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지구 온난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주: 노란색은 경제 영역, 파란색은 사회 영역, 초록색은 환경 영역에 해당

2)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트리플라잇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2020년부터 매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0대 사회문제를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해 온 대국민 사회문제 인식 조사 보고서이다. 일반 대중에게 인식 조사 데이터와 보고서를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https://svhub.co.kr/>

폭우, 폭염, 태풍, 산사태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가 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연재해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사회문제란 ‘동시대에 특정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구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24).

“사회문제가 기업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사회문제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사회문제의 정의를 보면, 기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자연재해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음은 몸소 체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기업에까지 재무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2022년 9월에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 시간당 11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포항제철소가 가동 50년 만에 섰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2022년 3분기와 4분기에 1조 3,4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기업 가치도 힌남노 상륙 직후였던 9월 6일 대비 9월 30일에 17%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조희진, 2025; 포스코, 2023). 문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후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에서 30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던 사건이 그 예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 가동이 섰다운되면서 2020년 매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4,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머니투데이, 2021). 자연재해가 기업 비즈니스에 직격탄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 사례이다. 그렇다면 자연재해 문제 외에 다른 사회문제도 기업과 관련이 있을까? 이를 파악하려면 사회문제 발생 원인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는 기업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높인다”

경제학에서는 사회문제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외부효과란 특정 주체의 경제



활동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편익(긍정적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어떤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발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개별 주체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과도 연결된다. 1968년에 Science에 실렸던 논문 제목이기도 한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물학자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이 만든 개념으로 소유권이 없는 지하자원, 초원, 공기 등의 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돼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현상을 지적한다(Hardin, 1968).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사회문제가 시대별, 지역별(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환경 오염 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자연자원도 많았고 환경도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산업혁명 이후 환경 오염이 극심해지면서 환경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의 대기가 더 깨끗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환경 오염에 따른 피해가 커진 탓도 있지만 환경 문제를 UN, WEF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의제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회문제는 그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나 가치와도 연결된다(장용석 외, 2018; 정명은, 2023). 이는 곧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지가 사회문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부터 가려 보자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환경 오염 문제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국내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탄소 배출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다.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탄소 국경세까지 등장하였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대표적인데, 당장 2026년부터 EU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전력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내 산업 부담액이 EU 수출 예상액의 11.3%인 약 8조 2,456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국회미래연구원, 2021) 탄소 배출비율이 높은 제조업,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즉, 모든 기업이 탄소 배출 문제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유독 큰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사람’ 문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가치를 떨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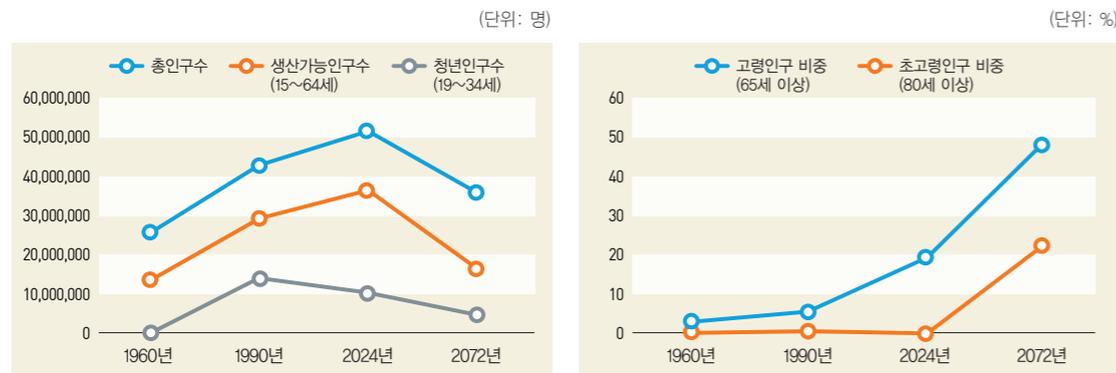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빈곤, 교육 불평등 등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해 왔다. 사회 구조상 특정인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 역시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각종 불평등 현상이 뒤섞이면서 저출산(고령화), 청년 고립, 자살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2010년 이후 UN,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삶의 질,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각된 것들이다(장용석 외, 2018). 즉,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게 인지되면서 급부상한 사회문제들이다. 어쩌면 청년 고립, 자살, 저출산, 결혼 기피 등에 대해 개인이 선택한 것이니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를 높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심리적 좌절, 자포자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 0.7명대의 출산율로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는 <그림 3>처럼, 2024년 대비 2072년 총인구는 30%, 생산가능인구는 54%, 청년 인구는 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 속도 역시 롤리코스터급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이 37년, 프랑스가 39년, 일본이 12년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심히 빠르다.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p 증가하고 30~64세 인구 비율이 1%p 감소할 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0.38%p 하락한다는 것이다(삼일 PwC



경영연구원, 2023).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매우 막막한 상황이다.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에 47.4%에서 2024년에 65.3%로 증가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부담의 가중도 불 보듯 뻔하다(통계청,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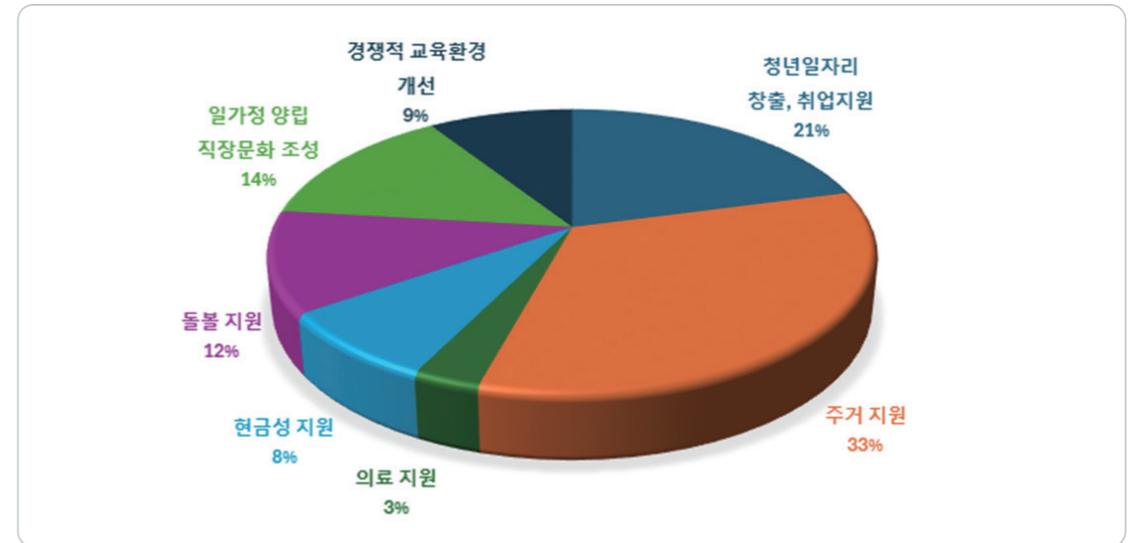
[그림 3]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 심화



자료: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저출산 이슈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 트리플라잇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저출산 문제가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이슈 30위로 처음 등장했는데 2023년에 13위, 2024년에는 12위로 급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이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실감하게 하는 인식 조사 결과도 있다. 2024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자기계발 및 개인의 자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를 선택한 비율이 20.2%에 불과한 반면, ‘경제적 부담(임신/출산비,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을 선택한 비율은 65.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환경’이 36.4%, ‘양육 및 돌봄 시스템 부족’이 28.3%를 차지하였다(사회적가치연구원 · 트리플라잇, 2024).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 지원(33.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20.8%)’이 과반을 차지하였다(통계청, 2024).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림 4] 국민들이 원하는 저출생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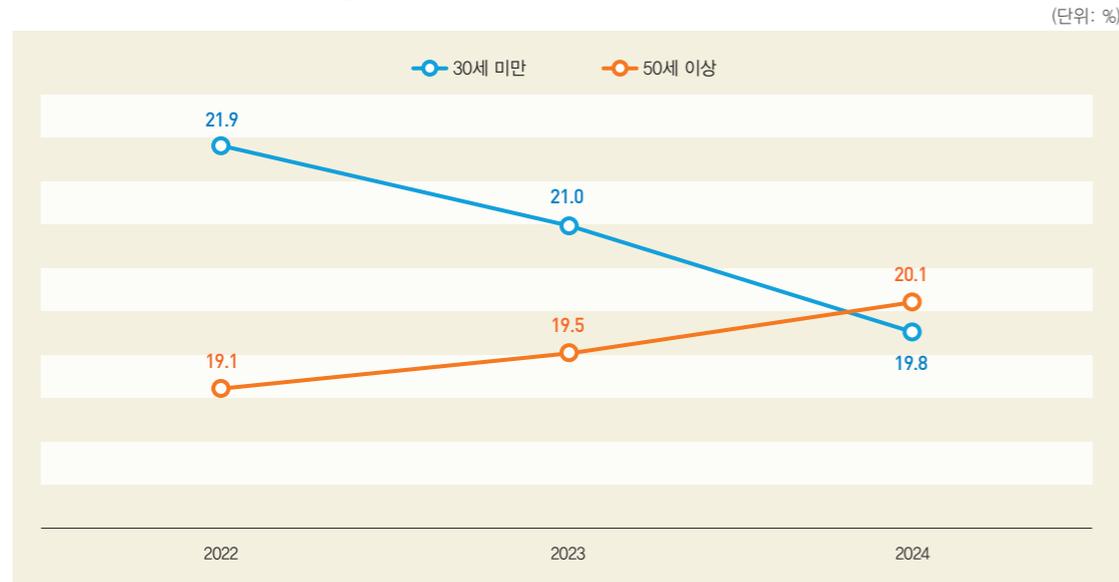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와중에 청년층의 고립 문제가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년 고립, 은둔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언론 기사가 늘고 있다. 그 이유로 고립, 은둔 청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2024년 현재 만 19~34세의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이 5.2%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고립, 은둔의 원인으로 ‘취업의 어려움(32.9%)’이 가장 높았다(국무조정실, 2024). 이에 2025년에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2024년 대비 6만 명 이상이 증가한 50만 4,000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립, 은둔 현상 역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용, 취업 등과 연관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기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환경 문제와는 달리,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립 등의 문제가 기업 조직의 고령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국내 500대 기업의 30세 미만 구성원의 비율보다 50세 이상 구성원의 비율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 전지와 같은 신규 업종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에 20대 구성원의 비율이 39.3%로 매우 높았지만 2023년에는 29.6%로 1년 사이에 약 10%p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업황의 침체로 신규 채용이 감소된 영향도 있었겠지만 청년층의 구직 동력 상실, 청년 인구 감소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조희진 외, 2018).

[그림 5] 국내 500대 기업의 인적 구성 변화



주: 전자공시시스템, 리더스인덱스, 2021-2023년 3년 연속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한 141개사.
 자료: 중앙일보, 2025. 8. 6., 20대 직원이 없다 "37세 막내가 A4출력 잔일".

아울러 청년층이 겪는 직장 내 고립이 기업의 비용을 늘린다는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회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그 이유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28%로 가장 높았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22%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보험회사 시그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로운 근로자 1명당 고용주는 연간 4,200달러(약 57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체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540억 달러(약 21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외로운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결근과 이직 가능성이 높고 협업 능력이 떨어져 개인의 저조한 업무 성과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아시아경제, 2024).

지금까지 청년 고립 문제를 기업 내부 구성원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만약 청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기업이라면 어떨까? 청년 고립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들의 경제 활동 포기가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비즈니스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업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회문제도 기업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환경 문제와 달리, 불합리한 사회 구조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는 주로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사회문제 발생 원인에 따라 사회문제를 유형화할 수 있다.³⁾

[표 2] 사회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원인	사회문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
	1차 결과	2차 결과	
부정적 외부효과 (환경 문제)	탄소 배출량 증가, 자원고갈 등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연재해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비즈니스 리스크 심화
불평등한 사회구조 (사람 문제)	소득 불평등, 빈곤, 주거 불평등, 고용 불평등 등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립, 자살률 증가 등	이해관계자 가치 저하

III. 기업의 비즈니스와 사회문제를 연결하는 방법 ●●●●●

“사회문제를 기업의 핵심 밸류 체인, 이해관계자와 연결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높이려면 사회문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시기별로 중요한 사회문제를 선정해 오기는

3) 개인의 의식이 성숙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다양성 존중, 산업 안전,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특정 사건과 사고로 촉발되는 경향이 크고 기업들이 ESG 공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은 생략하였다.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을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시킬 동력이 부족하다. 사회문제만 제시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사의 비즈니스나 핵심 이해관계자와 연결된 구체적인 사회문제 영역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표 3>의 틀을 활용하여 제품 조달, 기술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 밸류 체인⁴⁾의 각 단계에서 어디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탄소 배출이 특히 많은 밸류 체인 단계에서 이를 줄이는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2024년에 고효율 저전력 스크리버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99%까지 감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스크리버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장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데 온실가스 99% 감축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배출량을 거의 0%로 줄였다는 뜻이다(SK 하이닉스, 2024). 또한 반도체 회사는 물 사용량이 특히 많아 ‘물 먹는 하마’로 불리는데 삼성전자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폐수를 재활용하는 한편,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을 5단계로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자연에 내보내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로 ‘물 발자국’⁵⁾ 인증을 받았다(삼성전자, 2022). 이는 기업의 핵심 밸류 체인과 연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밸류 체인 단계별로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해안가에 있는지, 물 부족 위험 지역에 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추정할 수 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에 위치한 공급업체 1,390개사를 대상으로 홍수, 가뭄, 폭염, 산사태, 강풍,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TSMC, 2023). 이 역시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 관련 문제는 기업의 핵심 밸류 체인과 연결하여 비즈니스에 리스크가 되는 구체적인 영역을 체크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일반적으로 기업의 밸류 체인은 제품 조달, 기술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5) 물 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영국 정부가 2001년에 설립한 비영리기관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에서 기업의 물 발자국을 측정하고 물 절약 노력이 큰 기업들을 인증해 주고 있다.

[표 3] 환경 문제와 기업의 밸류 체인 간 연결 프레임(안)

	제품 조달	기술 개발	생산	유통	판매
탄소 배출					
자연재해					
물 사용량					
생물 다양성					
...					

환경 문제는 비교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람’ 관련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사람’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영역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화, 청년 고립 문제 등을 언급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 입장에서 어떤 특정 문제를 타깃으로 삼아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표 4] 사회문제 구체화 예시

	원인	결과
고령화	저출산, 결혼 기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노인 빈곤 증가, 독거 노인 증가, 노인 자살률 증가, 재취업 문제 등
청년 고립	신규 채용 부족, 경쟁 사회, 학벌주의 풍토 등	청년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인력난, 결혼 기피, 저출산 등
교육 불평등	빈부 격차, 교육 인프라 격차 등	청년 실업률 증가,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여기에 더하여 <표 5>의 틀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이들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고객으로서, 그리고 협력 회사(비즈니스 파트너)나 지역사회⁶⁾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구성원, 고객, 협력회사(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로 구분된다.

[표 5] 사람 문제와 기업의 이해관계자 간 연결 프레임(안)

	구성원	고객	협력회사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예를 들어 노인을 핵심 고객으로 하는 헬스케어 기업이라면 고령화 문제 중에서도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독거 노인 대상의 돌봄 서비스를 늘리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노인 고객층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효돌’의 노인을 위한 ‘AI 마음 돌봄 로봇’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마음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리 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이 64만 원이라고 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돌의 AI 돌봄 로봇이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2025). 효돌 입장에서는 부족한 돌봄 서비스를 대신해 자사의 기술을 제공하게 되면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비즈니스 임팩트도 높아진다.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실무 교육-협력 중소기업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비용이 1인당 276만 5,000원이었는데 기업의 청년 직무 교육이 확대된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2013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대졸 신입사원 교육에 1인당 연간 5,959만 원이 투입된다고 하니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중소벤처기업부, 2013). 이를 통해 청년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협력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대기업 입장에서 청년 대상의 직무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임팩트가 크다.

이처럼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특히 밸류 체인과 이해관계자와 연계된 사회문제를 찾았다면 이를 해결했을 때 예상되는 임팩트를 추정하기가 더 쉬워진다. 임팩트를 추정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회문제를 정부나 다른 주체들이 해결하고 있다면 이를 기업이 대신 해결했을 때 그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로 측정해 볼 수 있다. 그 값이 높다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reputation)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에도 그만큼 비즈니스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

IV. 나가며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과 사회문제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사회문제가 이제는 기업의 리스크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임팩트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을 발굴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사회문제 해결로 이들의 가치를 증진하고 그 관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업 가치도 제고할 수 있다. 즉,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브랜드 가치는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그 기업의 브랜드가 붙은 제품을 고객이 얼마나 선호할지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인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기업 가치의 약 25%를 차지한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큰 기업들의 주가가 S&P 평균 대비 84%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Brand Brief, 2024).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Stern 교수는 일찍이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문제 해결로 기업이 로열티를 보일 때 이들도 기업에 상호 호혜적으로 로열티를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자산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현용진, 2011).

예를 들면 SK의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을 위한 학습 플랫폼 mySUNI를 대학생에게 공유하는 ‘써니 C’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SK 구성원들이 직접 직무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실무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매일경제, 2023).



삼성전자 역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삼성청년 SW아카데미(SSAFY)’를 통해 대학생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IT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6월 현재 총 9,144명의 학생이 ‘SSAFY’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그중 85%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5). 두 프로그램 모두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역시 기업의 잠재 고객이 겪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는 결코 기업의 비즈니스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제적 가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회로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머지않아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2024,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국회미래연구원, 2021,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국가미래전략 Insight 27호.
 국회예산정책처, 2024, 2025년 조세지출예산분석.
 매일경제, 2023. 9. 24., SK, 대학·협력사에 교육 인프라 ‘씨니’ 공유.
 머니투데이, 2021. 3. 30., 삼성전자 美 오스틴 공장, 6주만에 재가동...피해규모 4,000억 추정.
 박지성, 2025, 1도의 가격: 기후변화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월북.
 사회적가치연구원, 2024, SK DBL 사회적 가치 측정 가이드북.
 사회적가치연구원·트리플라잇, 2024,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사회적가치연구원·트리플라잇, 2025,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삼성전자, 2022, 반도체에 꼭 필요한 물, 삼성전자 반도체는 수자원 순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삼일 PwC 경영연구원, 2023,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아시아경제, 2024. 5. 11., 이대로 가면 국가도 흔들린다...경제 손실만 11조원 이상[청년고립 24시].
 연합뉴스, 2025. 6. 24., 삼성 SSAFY 12기 수료...AI 중심으로 교육 커리큘럼 개편.
 임가영, 2025,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기업의 전략이 되는가: 성과기반금융(Outcome-Based Finance)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의 비즈니스 내재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Issue Brief, Vol. 10.
 장용석, 조희진, 김보경, 황정윤, 이영동, 2018,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린다, 문우사.
 정명은, 2023,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개념, 틀, 새로움에 대한 제고,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분배, 가치, 성과’ 제3부 제2장, 박영사.
 조선일보, 2025. 7. 28., ‘괴물 폭우’ 맞은 충남 피해액 3664억원...8월 피해 특별지원금 지급.
 조희진, 2024,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 기업 기후적응,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Issue Brief, Vol. 5.
 조희진, 2025,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 세액공제권 거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Issue Brief, Vol. 8.
 조희진, 손선화, 장용석, 2018,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27(1), 183-221.
 중소기업부, 2013, 2013년 신입사원 교육, 훈련 및 수습사원 관리 현황 조사.
 중앙일보, 2023. 7. 18., 2060년까지 태풍·폭우 피해 최대 연 26조, “기후재정 늘려야”.
 중앙일보, 2025. 5. 4., “약 드세요” 로봇이 알려준다...고령자 돌봄 ‘실버테크’시장 급성장.
 통계청, 2024a, 202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2024b,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4.
 포스코, 2023, 2022 포스코홀딩스 기업시민보고서.
 한국일보, 2025. 7. 21., ‘극한 폭우’ 사망자 한 명 더 늘어 18명...실종 9명.
 현용진, 2011, 기업과 고객은 공생관계 ‘상호 호혜적 로열티’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DBR 73호.
 Brand Brief, 2024. 5. 24., 브랜드 가치 높은 기업에 투자했더니 수익률 784%...브랜딩, 소비자·투자자 동시 고려해야.
 SK 하이닉스, 2024, [넷제로 2050] SK하이닉스, “스크러버 온실가스 처리 효율 99% 신기술 개발...넷제로 달성 앞장선다”, SK HYNIX NEWSROOM.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Sachs, J., Lafortune, G., and Fuller, G., 2024, The SDGs and the UN Summit of th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Dublin Univ. Press.
 TSMC, 2023, TCFD Report.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9, Annual Report.
 WEF, 2025a, Beyond Compliance: Embedding Impact through Innovative Finance.
 WEF, 2025b, The Global Risks Report 2025.